

한국수어법안

(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25
----------	------

발의연월일: 2013. 10. 22.

발 의 자: 이에리사·안규백·김정록
박성효·이한성·이만우
서상기·조명철·문정림
김무성·김장실·주호영
강은희·박인숙·박성호
염동열·민병주·이군현
김희정·김세연 의원
(20인)

제안이유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우리 사회의 수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 이러한 결과는 농인으로 하여금 교육, 취업 및 일상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겪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이 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상으로는 「국어기본법」에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인의 경우에는 국어와 다른 형식의 언어인 시각·동작체계의 수어(sign language)를 제1언어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수어를 법제도화하여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수어(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규정들이 있어 의사소통수단을 지원하는 근거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수어를 공용어로 선언하고, 한국수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어(signed languages)는 음성언어와는 다른 언어형식을 지니는 수어의 개별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농인들의 교육권, 사회권 등 인권은 제1언어 또는 모어로서 언어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함. 또한 국제적으로는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를 법률로 공인하거나 공용어로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급·발전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농인이 일상생활의 언어로 사용하는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언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한국수어’란 한국 농인의 공용어이며, 한국 농인의 사회·문화 속에서 시각·동작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한국어와 다른 고유한 형식의 언어로 정의함(안 제2조 및 제3조제1호).
- 다. 한국수어는 농인의 제1언어이므로 농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야 하고, 농인은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 라. 농인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 권리가 모든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안 제4조제4항), 농인들은 다양한 대체 의사소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됨(안 제4조제5항).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한국수어연구소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2조제1항).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한국수어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아.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그 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수어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에서의 한국수어에 의한 교육을 지원·촉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농인 교사 또는 한국수어를 사용하여 교육이 가능한 교사를 배치하여야 함(안 제14조제1항).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언어로 사용하며 한국수어를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함(안 제14조제2항).

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며,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인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고, 교육기관, 사업장 등에서도 수어통역 지원을 보장하여야 함(안 제17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한국수어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인이 일상생활의 언어로 사용하는 한국수어가 음성언어인 국어기본법 제3조제1호의 국어와 다른 형식의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정하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용어) ①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농인의 언어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사회·문화 속에서 시각·동작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국어와 다른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유사수어체계”란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 국어 문법형식에 한국수어 단어를 대응시킨 인위적인 체계를 말한다.
3.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사회·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 생활의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사회·문화”란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및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한국수어를 일상생활의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이 농사회·문화 속에서 가지는 일체감 또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농인이 사용하는 한국수어를 음성언어인 국어로 변환하거나 음성언어인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본이념 및 원칙) ①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 공동체를 기반으로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한국수어는 농인의 제1언어이므로 농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

③ 농인은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이하 “모든 생활 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 권리가 모든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농인을 포함한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등(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은 한국수어 및 유사수어체계 등(이하 “한국수어등”이라 한다) 다양한 의사소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제5조(법의 해석 및 적용) 국가는 이 법의 규정이 「장애인권리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등의 책무) ① 공공기관등은 한국수어의 진흥을 위한 지원·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및 촉진·발전을 위한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과 협력하여야 하고, 제13조에 따른 한국수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 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통역과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남북한 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한국수어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법령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정부는 2년마다 한국수어의 진흥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한국수어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수집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

다.

제3장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2조(한국수어의 연구 및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한국수어연구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한국수어연구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수어 관련 법인·단체에게 한국수어교육원을 위탁 또는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 또는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이 그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위탁 또는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한국수어심의회) ①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그 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수어심

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운영방법, 설치방법·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육과 한국수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에서의 한국수어에 의한 교육을 지원·촉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농인 교사 또는 한국수어를 사용하여 교육이 가능한 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배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언어로 사용하고 한국수어를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한국수어 및 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에 의한 학습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이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제작 및 보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와 학부모의 한국수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위 제1항부터 제6항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한국수어의 사용 및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수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간 대중매체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 및 각종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한국수어의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급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농인들은 수어통역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인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서 농인에게 수어통역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에서 농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수어통역 지원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수어통역을 지원할 때에 농인의 요청이 있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어체계, 실시간 문자통역 및 속기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⑥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 인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에 대하여 한국수어등의 의사소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한국수어의 날) 정부는 한국수어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여 기념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용어 개정)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한국수어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한국수어연구소 설치(안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한국수어연구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한국수어연구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제정안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비용추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안 제11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한국수어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각 장애인 및 언어 장애인 등록 현황¹⁾을 고려할 때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5년간 총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 안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수어 관련 법인·단체에게 한국수어교육원을 위탁 또는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위탁 또는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과 일반인에 대한 수화 교육 및 보급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의 운영비를 지원²⁾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안 제13조는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그 발전을 위한 주요 사항을 결

1) 2012년 기준 청각 장애인 및 언어 장애인 등록자는 각각 258,589명 및 17,743명임.

2) 2012년 기준 수화통역센터(187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액은 총 237억원임.

정하기 위해서는 농인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마. 안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에서의 한국수어에 의한 교육을 지원·촉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농인 교사 또는 한국수어를 사용하여 교육이 가능한 교사를 배치하고,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언어로 사용하고 한국수어를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하며,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에 의한 학습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이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제작 및 보급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한국수어 사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0조³⁾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기본법」 제18조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도록 하며,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안 제1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수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고, 한국수어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 및 각종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하며, 한국수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

3) 제20조(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술활동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⁵⁾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의 업무 중 하나로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표준화 및 정보자원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안 제16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급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8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안 제1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인에게 수화통역을 지원하며,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서 농인에게 수어통역이 보장되도록 하고, 농인등에 대하여 한국수어등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⁶⁾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5) 제39조(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언어정책 관련 법·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언어와 문자, 특수언어에 관한 조사·연구
3.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관리
4.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5.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

6)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1조⁷⁾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의 시·군·구지부에 설치된 「수화통역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수화 교육 및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안 제18조는 정부는 한국수어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여 기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 안 제1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과 일반인에 대한 수화 교육 및 보급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한국수어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은 [표 1]과 같이 2014년 18억 7,6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92억 1,600만원으로 추정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1] 한국수어연구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한국수어연구소 설치 (안 제12조)	1,876	1,765	1,811	1,858	1,906	9,2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과

과 장 정 영 진

예산분석관 임 준 기

(02-788-4646, jangsan@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은 한국수어연구소의 설치에 따른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가 된다.

〈 비용추계 방법 〉

추가 재정소요 = 한국수어연구소 운영비 + 자산취득비

2. 한국수어연구소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안 제12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한국수어연구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한국수어연구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른 한국수어연구소는 국립국어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한국수어연구소의 인원과 예산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도서관연구소의 인원과 예산을 준용하고 사무공간은 기존 국립국어원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도서관연구소의 인원과 예산은 [표 2]와 같다.

[표 2]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도서관 현황: 2013년

(단위: 명, 백만원)

	정원	예산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3	1,675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수어연구소의 신설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는 [표 2]에 따른 도서관 연구소의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NABO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망⁸⁾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한국수어연구소의 신설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조사한 2012년 기준 신규 위원회 설치에 따른 1인당 자산취득비(6,515천원)⁹⁾에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4년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6,872천원)에 직원 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한국수어연구소의 신설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합한 금액으로서 [표 3]과 같이 2014년 18억 7,6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92억 1,600만원으로 추정된다.

[표 3] 한국수어연구소 신설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운영비(a)	1,719	1,765	1,811	1,858	1,906	9,059
자산취득비(b)	157	-	-	-	-	157
계(a+b)	1,876	1,765	1,811	1,858	1,906	9,216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한국수어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은 [표 4]와 같이 2014년 18억 7,6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92억 1,600만원으로 추정된다.

8)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수정 경제전망』, 2013. 4. p. 2, 2012년 2.2%, 2013년 2.3%, 2014년 2.6%, 2015년 2.7%, 2016년 이후는 2.6%임.

9)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2012.12, p. 19.

[표 4] 한국수어연구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한국수어연구소 설치 (안 제12조)	1,876	1,765	1,811	1,858	1,906	9,2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